

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(피고 대여금채무 보증목적으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부도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 전화·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 전화·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그 중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,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,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데, 소외 주식회사 ◇◇산업 대표 ◇◇◇가 발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표를 차용증에 갈음하여, 원고에게 배서·양도하여 원고는 그 수표들의 최후 소지인이 되었습니다.

다 음

종 류	금 액	지 급 지	발 행 일
가계수표	○○○원	(주) ○○은행 ○○지점	20○○.○.○.
가계수표	○○○원	(주) ○○은행 ○○지점	20○○.○.○.
당좌수표	○○○원	(주) ○○은행 ○○지점	20○○.○.○.
당좌수표	○○○원	(주) ○○은행 ○○지점	20○○.○.○.

- 원고는 지급기일에 지급지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,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.
-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○○○원 및 그 중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,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,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. 갑 제1호증의 1, 2 | 가계수표앞면 및 뒷면 |
| 1. 갑 제2호증의 1, 2 | 당좌수표앞면 및 뒷면 |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 2통 |
| 1. 소장부분 | 1통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|

20○○. ○. ○.

위 원 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		
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		
불복절차 및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(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16378 판결),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의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(대법원 1976. 11. 23. 선고 76다1391 판결), 이러한 이치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도 동일함. 		

※ (1) 관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)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